



성명서

전국여성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347호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전화:02)6788-3628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막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1일까지 여성폭력추방주간이다. 11월 25일은 유엔(UN)이 지정한 세계여성폭력추방의날이기도 하다. 이는 1960년 11월 25일 도미니카 공화국의 독재자에 의해 살해된 세 명의 정치 활동가 미라발 자매들을 기리기 위해 시작되었다.

여성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올해 하반기에만 해도 인하대 성폭력 살인사건,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서산 아내 살인사건 등 연이은 사건들로 인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직장 내 성희롱뿐만 아니라, 불법촬영, 데이트폭력, 온라인 그루밍 등 여성폭력은 일상 속에서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다. 2차 피해나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해 강력범죄 피해자 2만2476명 중 여성은 85.8%를 차지할 만큼 여성의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올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 여성은 16.3%에 불과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여성이라 할지라도 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스스로 자유를 통제하게 된다.

국민의 생명 보호는 안전 보장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 이를 위해 가해자 처벌 강화는 물론 피해자 예방과 보호를 법에 명시하고 있지만 폭력 발생 실태에 견주어 볼 때 역부족인 상황이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2021년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을 주도했고, 현재 스토킹피해자보호법안 제정에 주력하고 있다. 이밖에도 불법촬영 예방, 데이트폭력처벌 규정 등 법·제도 개선과제가 산적해있다.

무엇보다 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유엔여성기구(UN Women)는 이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유해한 남성성, 사회적 규범의 변화, 구조적 성 불평등과 성 고정관념 제거” 등을 말했다.

우리나라는 여성폭력을 조장하는 구조적 시스템을 바로잡고, 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 등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기 위해 여성가족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여성혐오와 왜곡된 젠더갈등에 편승해 성별 갈라치기 전략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극히 유감스럽다.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이재정)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며, 성평등정책이 후퇴하지 않도록 정부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나아가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향한 모든 폭력에 반대하며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22년 1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이재정)